



조간 제8005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음력 11월 26일)

‘행정통합’ 광주·전남 공무원, 현 근무지서 일한다

시·도, 특별법에 제도적 장치 마련...4급 이상은 예외
기존 행정·재정적 불이익 배제 등 통합 쟁점 구체화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추진...“광주 정신 넣을 것”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핵심 논의가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도민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법에 원칙을 담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정 인센티브와 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통합 추진의 방향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2·8·9·19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광주전남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기존 공무원들은 종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을 이유로 한 강제 인사 이동이나 처우 불이익은 없도록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강 시장은 “통합에는 공감하지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과 도민이 많다”며 “특별법에 기존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부담

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담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도록 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특례 조항을 마련해 특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넓히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에 임용된 지방공무원과 지방교육공무원 모두 현 근무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못 박았다.

강 시장은 “광주 공무원이 전남으로, 전남 공무원이 광주로 강제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 행정체계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5·6급 공무원이 승진해 4급이 되면 통합 이후 광주·전남 간 인사 이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자의 배치와 전보 원직 등 세부 사항은 통합 이후 특별시장이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교육 자치는 특별법에 독립된 편을 만들 것이고, 그를 통해서 교육 공무원의 신분도 현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 시도 명칭에 대해서는 “광주라는 이름은 당연히 명칭에 특별시에 들어가게 된다. 광주가 갖는 정신, 민주 인권 평화 정의로 보면 가치를 갖는 게 광주 정신이다. 이 법의 목적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특별시로 (특별법에) 넣을 것이고 최종 입법 과정을 지켜봐 달라. 부가 문구가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율러,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도 의회와 구청·구의회,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철학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재정 인센티브와 대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이 2월 말 통고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1월 말까지 전 시·군을 돌며 공청회를 열어 통합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 김 지사는 “정치적 유희를 떠난 지역의 미래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특례를 통해 공공수도 개발과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AI 기반 농업 전환으로 농촌 소득과 청년 유입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며 “시간상 주민투표는 어렵지만, 시·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리현 정상회담장에서 확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경제안보 영역 포괄적 협력 강화기로

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88분 정상회담
세이 희생자 유해 수습·과거사 논의 진전

한일 양국 정상은 13일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을 통해 과거사 논의를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경제안보 영역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리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늘의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른 과거를 딛고 새로운 60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하고 바로 서틀외교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며 올해 한일 관계를 격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과학기술 등 포괄적 협력 △AI,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지방 성장 등 구체적 성과 도출 △스캐프 범죄 공동 대응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

꾸고 있다”며 “그동안 양국이 서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수습을 위한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한중일 간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88분 동안 회담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전남특별시’ 명칭...광주·전남 정체성 논란

위상 기대속 일부 ‘특별도’ 주장
주민·의회 의견 물어 변경 검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특별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명칭 존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으로 광주와 전남의 고유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통합 광역 시도를 ‘특별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로 했다.

통합 특별시는 기존과 같은 5개 자치구와 22개 전남 시·군을 두는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체제에서 광주시는 기존 단일 명칭이 사라지고 전남과 함께 새로운 통합 명칭(가칭 광주전남 특별시)을 쓰게 된다.

양 시·도는 그동안 특별시와 특별도 2개 안을 검토해왔다.

특별도는 통합시도 아래 ‘광주 특례시’를 두고 그 아래 광주 5개 자치구를 두게 하고, 22개 전남 시군도 그대로 존속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논의 과정에서 특별도는 광주 5개 자치구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데다, 시도 통합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특별시로 갈 경우 ‘단일 광역시’에서 ‘통합 광역시’로 급이 올라가고 통합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명칭이 함께 쓰이면서 나타날 현상과 우려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전남도민 입장에서 광주가 앞에 오거나 단독으로 부각되면 전남이 광주에 흡수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예산·

정책 중심 또한 광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 광주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광주 비엔날레 등으로 대표된 민주·인권·문화 도시라는 광주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특별시로 할 경우 여수 같은 시 단위 주소는 ‘광주전남특별시 여수시’ 등 ‘시’가 2번이나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주시 단위를 존속시키고 특별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명칭의 민감성을 고려해 시도는 변경의 여지를 남겨뒀다.

시도는 특별법에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일단 담고, 추후 주민·통합 의회 의견을 들어 명칭을 변경하는 유예조항을 둔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